

## “내란세력 청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하자” 금속노조 2025년 시무식 ... “윤석열 파면하고 국민의힘 해체해야”

금속노조가 2025년을 시작하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앞에서 불법계엄 내란세력 청산과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다짐했다.

금속노조가 1월 2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2025년 시무식을 열고 노조 13기 2년 차를 시작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앞에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열사 앞에서 산 자로서 얼마나 부끄럽 없이 살아왔는지 되돌아본다” 며 “아직 윤석열을 처단하지 못했다. 시민을 우롱하고 날뛰는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그를 비호 하는 국민의힘 역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고 다짐했다.

합동시무식에 참석한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과 김태을 서울지부장도 역시 불법계엄 내란세력 청산 투쟁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 노조 2025년 사업계획 토론 시작

시무식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이어 민주노총 합동시무식에 참석하고, 열사 묘역을 돌며 참배를

진행했다. 모란공원 일정을 마친 노조 임원, 사무처는 2025년 노조 투쟁방침과 사업계획 토론을 위한 수련회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2박 3일 윤석열 체포 집중 철야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못 잡는 무능한 수사당국은 비켜라” 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체포 투쟁에 나선다” 고 발표했다.



# “현대제철 사측의 생산 우선이 노동자 죽음 불러”

##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조사 결과 발표 ... 정비 작업표준 마련 요구

현대제철 자본의 생산 우선 정책과 노후 설비 미교체가 노동자를 중대재해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2월 12일 오후 4시께 발생했다. 재해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설비팀 소속으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러 나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긴 지 1시간도 안 돼 숨졌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이번 현대제철 당진공장 재해자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CO Hb)가 82.2H%로 나타났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00ppm로 3분 이내 사망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20, 21일 사고 현장의 신축이음관 설비에 결함이 연속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측 지시

에 따라 메탈본드로 보수작업을 했다. 재해자는 사고가 난 곳에 스프레이 작업 등 추가 정비 작업을 했다.

11월 20일 배관 설비 결함이 나타났을 당시,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에 달했다. 사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시설을 바로 교체하지 않고 메탈본드 시공만 했다.

### 사측, 노후 설비 교체 미루고 보호구 제대로 지급 안 해

이상기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메탈본드는 영구적이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다시 생긴다”라며 “얼마나 위험한지 뻔히 알고 정비가 가능한데도 사측은 생산 차질, 비용 절감을 앞세워 노후 설비 교체를 2025년 4월로 미루는 등 늦장을 부렸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 일회용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대제철 사측이 산업안전보호구가 아닌 휴대용 제품을 제공한 것. 사고 현장에는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가스 감지기

도 없었다.

이상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번 사고 현장의 경우 보수작업표준도 없었다”라며 “2인 1조 작업 원칙이 있지만 허술에 불과했다. 사측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자 한 명이 위험한 정비 업무를 혼자서 한다”라고 알렸다.

이상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측이 생산만 우선하고 안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본드 시공 같은 땀질 처방이 아닌 노후 설비 교체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이번 중대재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사측에 ▲신축이음관 수리작업표준 마련 ▲정비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비대면 누출 확인 방식 도입 ▲노후 가스 배관 전면 점검 ▲실질적 인원 충원을 통한 2인 1조 작업 실시 ▲위험성 평가 내실화 ▲현대제철 SCR(Safety Core Rules) 제도 폐기 등을 요구했다.